

원산지관리사 기본교재 수출입통관 개정표

1. 주요 개정사항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2p 2번째줄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거나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 또는 조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관세(Customs, Customs Duties, Tariff)란 국가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거나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적 부담 이다.	용어순화
3p 14번째줄	<p>1) 조세적 성격</p> <p>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국세로서 다음과 같은 조세로서의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p> <p>(1) 관세는 국가가 부과·징수의 주체이다.</p> <p>관세는 부과·징수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의 하나이다.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관세는 지방세가 아니므로 오직 국가만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p>	<p>1) 조세적 성격</p> <p>관세는 수입, 수출 및 통과물품에 부과하는 국세로서 다음과 같은 조세로서의 일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p> <p>(1) 관세는 국가가 부과·징수의 주체이다.</p> <p>관세는 부과·징수의 주체가 국가인 조세의 하나이다.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데, 관세는 국세로서 지방세가 아니므로 오직 국가만이 부과·징수할 수 있다.</p>	정의 명확화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4p 21번째줄	<p>(5) 관세는 반태급부가 아니며 강제적으로 징수한다.</p> <p>관세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반태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한다. 관세는 개인에 특허, 허가 등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 이익을 부여하고 그 반태급부로 징수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과는 다르다.</p>	<p>(5) 관세는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한다.</p> <p>관세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대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한다. 관세는 개인에 특허, 허가 등에 다른 일정한 권리, 이익을 부여하고 그 대가로 징수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과는 다르다.</p>	용어 순화
5p 10번째줄	<p>(1) 관세는 소비를 궁극적인 과세대상으로 한다. (소비세)</p> <p>(생략)</p> <p>관세는 물품이 수입될 때 수입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데, 물품의 소비를 궁극적인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이다.</p>	<p>(1) 관세는 소비를 궁극적인 과세대상으로 한다. (소비세)</p> <p>(생략)</p> <p>현행 관세법에는 물품이 수입될 때 수입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데, 물품의 소비를 궁극적인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비세이다.</p>	정의 명확화
5p 16번째줄	<p>(2) 관세는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한다. (간접세)</p> <p>(생략)</p> <p>결국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수입자와 실질적 부담자인 구매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관세는 간접세이다. 다만, 수입자가 양도없이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실질적 부담자가 같다.</p>	<p>(2) 관세는 최종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납부한다. (간접세)</p> <p>(생략)</p> <p>직접 소득 등에 부과되는 소득세 및 법인세 등과 달리,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수입자와 실질적 부담자인 구매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관세는 간접세이다. 다만, 수입자가 물품을 넘겨주지 않고 자기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납세의무자와 실질적 부담자가 같다.</p>	용어 순화
5p 22번째줄	<p>(3) 관세는 물품에 부과·징수한다. (대물세)</p> <p>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 고려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된다. 이 중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물세이다.</p>	<p>(3) 관세는 물품에 부과·징수한다. (대물세)</p> <p>조세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정 고려여부에 따라 인세와 물세로 분류된다. 이 중 관세는 물건의 성질·수량 등의 물적사항만을 고려하는 물세이다.</p>	정의 명확화

페이지	2019년 기본교제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5p 각주	2)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출시 환급한다.	2) 물품에는 소비재 이외에도 생산재의 사용·소모, 기계의 사용 등도 소비로 보고 과세한다. 원칙적으로 외국물품을 사용·소비하지 않으면 관세를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반출시 환급한다.	정의 명확화																																								
6p 3번째줄	(4) 관세는 수입 신고할때마다 부과·징수한다. (수시세)	(4) 관세는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마다 부과·징수한다. (수시세)	정의 명확화																																								
11p 각주	9) 보세구역(bonded area)은 과세권을 유보받을 수 있는 구역으로서,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시 관세를 징수 한다.	9) 보세구역(bonded area)은 통관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보관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시 관세를 징수하며 통관해야 한다. 또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사용·소비하게 되면 관세부과 대상이 된다.	정의 명확화																																								
12p 각주	11) 수입의 대상으로서의 외국물품은 ①부터 ③까지이며, ④ 기타 외국물품으로 인정 되는 물품은 내국물품이었으나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는) ‘간주외국물품’이다.	11) 수입의 대상으로서의 외국물품은 ①부터 ③까지이며, ④ 기타 외국물품으로 인정 되는 물품은 내국물품이었으나 외국물품으로 간주되는(regarded) ‘간주외국물품’이다.	용어 보충																																								
56p 표1	<p style="text-align: center;">\ 긴급관세 비교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긴급관세</th><th>특정국 긴급관세</th><th>농림축산물 긴급관세</th></tr> </thead> <tbody> <tr> <td>근거법령</td><td>관세법 제65조</td><td>관세법 제67조의2</td><td>관세법 제68조</td></tr> <tr> <td>대상</td><td>모든 수입물품</td><td>특정국 수입물품</td><td>농림축산물 중 TE 양허품목</td></tr> <tr> <td>요건</td><td>심각한 피해</td><td>국내시장 교란 무역전환발생</td><td>물량기준 가격기준</td></tr> <tr> <td>부과기간</td><td>4년(최대 8년)</td><td>제한없음</td><td>물량기준: 당해 연도말 가격기준: 수입량 감소시까지</td></tr> </tbody> </table>	구분	긴급관세	특정국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긴급관세	근거법령	관세법 제65조	관세법 제67조의2	관세법 제68조	대상	모든 수입물품	특정국 수입물품	농림축산물 중 TE 양허품목	요건	심각한 피해	국내시장 교란 무역전환발생	물량기준 가격기준	부과기간	4년(최대 8년)	제한없음	물량기준: 당해 연도말 가격기준: 수입량 감소시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 긴급관세 비교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긴급관세</th><th>특정국 긴급관세</th><th>농림축산물 긴급관세</th></tr> </thead> <tbody> <tr> <td>근거법령</td><td>관세법 제65조</td><td>관세법 제67조의2</td><td>관세법 제68조</td></tr> <tr> <td>대상</td><td>모든 수입물품</td><td>특정국 수입물품</td><td>농림축산물 중 TE (Tariff Equivalent : 관세상당치) 양허품목</td></tr> <tr> <td>요건</td><td>심각한 피해</td><td>국내시장 교란 무역전환발생</td><td>물량기준 가격기준</td></tr> <tr> <td>부과기간</td><td>4년(최대 8년)</td><td>제한없음</td><td>물량기준: 당해 연도말 가격기준: 수입량 감소시까지</td></tr> </tbody> </table>	구분	긴급관세	특정국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긴급관세	근거법령	관세법 제65조	관세법 제67조의2	관세법 제68조	대상	모든 수입물품	특정국 수입물품	농림축산물 중 TE (Tariff Equivalent : 관세상당치) 양허품목	요건	심각한 피해	국내시장 교란 무역전환발생	물량기준 가격기준	부과기간	4년(최대 8년)	제한없음	물량기준: 당해 연도말 가격기준: 수입량 감소시까지	용어 보충
구분	긴급관세	특정국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긴급관세																																								
근거법령	관세법 제65조	관세법 제67조의2	관세법 제68조																																								
대상	모든 수입물품	특정국 수입물품	농림축산물 중 TE 양허품목																																								
요건	심각한 피해	국내시장 교란 무역전환발생	물량기준 가격기준																																								
부과기간	4년(최대 8년)	제한없음	물량기준: 당해 연도말 가격기준: 수입량 감소시까지																																								
구분	긴급관세	특정국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긴급관세																																								
근거법령	관세법 제65조	관세법 제67조의2	관세법 제68조																																								
대상	모든 수입물품	특정국 수입물품	농림축산물 중 TE (Tariff Equivalent : 관세상당치) 양허품목																																								
요건	심각한 피해	국내시장 교란 무역전환발생	물량기준 가격기준																																								
부과기간	4년(최대 8년)	제한없음	물량기준: 당해 연도말 가격기준: 수입량 감소시까지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56p 표2	$\text{조정관세율 (일반)} = \left(\frac{100}{100} - \text{기본세율} \right) + \text{기본세율}$	$\text{조정관세율 (일반)} = \left\{ \left(\frac{100}{100} - \text{기본세율} \right) + \text{기본세율} \right\} \text{의 범위의 율}$	용어 보충
57p 6번째줄	<p>③ 농림축수산물의 경우</p> <p>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수산물의 경우</p> <p>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이란 국내외 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비율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p>	용어 설명
58p 표1 표2 표3	<p>(8) 할당관세</p> <p>② 관세율 인하</p> $\text{할당관세율(일정수량 이내)} = \text{기본세율} - 40\%$ <p>③ 관세율 인상</p> <p>㉠ 일반물품</p> $\text{할당관세율(일정수량 초과)} = \text{기본세율} + 40\%$ <p>㉡ 농림축수산물</p> $\text{할당관세율 (농림축수산물, 일정수량 초과)} = \text{기본세율} + \text{국내외 가격차}$	<p>(8) 할당관세</p> <p>② 관세율 인하</p> $\text{할당관세율(일정수량 이내)} = \text{기본세율} - 40\% \text{ 범위의 율}$ <p>③ 관세율 인상</p> <p>㉠ 일반물품</p> $\text{할당관세율(일정수량 초과)} = \text{기본세율} + 40\% \text{ 범위의 율}$ <p>㉡ 농림축수산물</p> $\text{할당관세율 (농림축수산물, 일정수량 초과)} = \text{기본세율} + \text{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	용어 명확화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59p 표1 표2	<p>③ 관세율 인상·인하</p> <p>㉠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관세율 인상)</p> $\text{계절관세율} = \text{기본세율} + \text{국내외 가격차}$ <p>㉡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관세율 인하)</p> $\text{계절관세율} = \text{기본세율} - 40\%$	<p>③ 관세율 인상·인하</p> <p>㉠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관세율 인상)</p> $\text{계절관세율} = \text{기본세율} + \text{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 <p>㉡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관세율 인하)</p> $\text{계절관세율} = \text{기본세율} - 40\% \text{ 범위의 율}$	용어 명확화
62p	<p>(3) 국제협력관세의 종류</p> <p>①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s) 관세</p> <p>② 세계무역기구(WTO)개발도상국간 무역협정(TNDC; Protocol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관세</p> <p>③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rtnership of Trade Agreement) 특혜관세</p> <p>④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관세</p> <p>⑤ FTA(Free Trade Agreement) 협정관세</p>	<p>(3) 국제협력관세의 종류</p> <p>①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대우(MFN; Most Favoured Nations) 관세</p> <p>② 세계무역기구(WTO)개발도상국간 무역협정(TNDC; Protocol Relating to Trade Negotiations among Developing Countries) 관세</p> <p>③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rtnership of Trade Agreement) 특혜관세</p> <p>④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Agreement o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among Developing Countries) 관세</p> <p>⑤ (삭제)</p>	관세법 기준에 따른 수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63p 2번째줄	<p>6) 카타세울의 적용</p> <p>카타 세울에는 간이세율과 합의에 의한 세율, 용도세율을 분류한다. 간이세율·합의에 의한 세율·용도세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들 세율은 수입주체가 여행자이거나, 수입자와 관세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세율이다.</p>	<p>6) 세율의 적용</p> <p>관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일반 원칙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간이세율·합의에 의한 세율·용도세율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이들 세율은 수입주체가 여행자이거나, 수입자와 관세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우선 사용될 수 있는 세율이다.</p>	설명 명확화
75p 11번째줄	<p>(3)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p> <p>(이하 생략)</p> <p>(4) 2인 이상의 특별납세의무자</p> <p>(이하 생략)</p> <p>(5) 분할·합병법인 등</p> <p>(이하 생략)</p>	<p>(3)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아닌 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p> <p>(이하 생략)</p> <p>(4) 구매대행업자</p> <p>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화주의 요청에 따라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구매대행업자”라 한다)가 ① 화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②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p> <p>(5) 2인 이상의 특별납세의무자</p> <p>(이하 생략)</p> <p>(6) 분할·합병법인 등</p> <p>(이하 생략)</p>	2019.12.31. 관세법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76p 표	\ 연대납세의무자 요건 및 납부세액 \			\ 연대납세의무자 요건 및 납부세액 \			번호 변경 2019.12.31. 관세법 개정	
	연대납세의무자	요건	납부세액	연대납세의무자	요건	납부세액		
	수입신고인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	수입신고인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		
	공유자·공동사업자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관세·가산세· 채납처분비	공유자·공동사업자	수입신고물품이 공유물이거나 공동사업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	관세·가산세· 채납처분비		
	수입신고시 화주가 아닌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유죄판결의 경우 등		수입신고시 화주가 아닌자를 납세의무자로 신고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유죄판결의 경우 등			
	2인 이상의 특별납세의무자	특별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구매대행업자	화주로부터 관세등 상당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정보 거짓으로 제공하였을 경우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신회사	①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③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2인 이상의 특별납세의무자	특별납세의무자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분할되는 법인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신회사	①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②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③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80p 표	\ 일반 사전심사와 ACVA 비교 \			\ 일반 사전심사와 ACVA 비교 \			설명추가	
	심사담당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 ACVA 사전심사반 별도 구성	심사담당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분류원 ※ ACVA 사전심사반 별도 구성(본부세관)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82p 2번째줄	4) 재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4) 재심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재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명 추가
88p 2번째줄 및 15번째줄	제3장은 신고와 납부에 관한 것으로서 가격신고, 세액의 확정(신고납부, 부과지), 세액의 변경, 세액의 납부 그리고 카산금·가산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생략) 카산금과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관세 등의 납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게끔 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특히 가산세의 경우 종류와 적용세율이 다양하므로 추가적인 세액산출의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제3장은 신고와 납부에 관한 것으로서 가격신고, 세액의 확정(신고납부, 부과지), 세액의 변경, 세액의 납부 그리고 가산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생략)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관세 등의 납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행하게끔 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가산세의 경우 종류와 적용세율이 다양하므로 추가적인 세액산출의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2019.12.31. 관세법 개정
93p 9번째줄	(3) 확정가격신고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3) 확정가격신고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자는 2년의 범위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확정된 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4) 사후정산 부족하게 징수한 때에는 추가 징수하고 과다하게 징수한 때에는 환급한다.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과다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이자성격인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설명 추가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01p 10번째줄	2) 납세신고사항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②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2) 납세신고사항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②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③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④ 기타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시행령 내용추가
115p 6번째줄	정정, 보정, 수정, 경정 및 경정청구는 시기와 주체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 가산세 또는 가산금 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액의 변경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유의해야 한다.	정정, 보정, 수정, 경정 및 경정청구는 시기와 주체에 따라 구분되며 각각 가산세 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액의 변경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유의해야 한다.	2019.12.31. 관세법 개정
116p 각주	180) 보정신청의 경우에도,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정신청한 후 그 다음날까지 부족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을 납부해야 한다.	180) 보정신청의 경우에도,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을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정신청한 후 그 다음날까지 부족세액을 납부해야 하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을 납부해야 한다.	2019.12.31. 관세법 개정
118p 1번째줄	② 보정자의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자를 면제한다. ㉠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보정자의 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자를 면제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항을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 우편물 (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19.12.31. 관세법 개정 2020.2.11. 시행령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18p 16번째줄	4) 가산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정신고시 납부하는 가산세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한다.	4) 가산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정신고시 납부하는 가산세를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라고 한다.	2019.12.31. 관세법 개정
118p 각주	183) 관세법 제42조(가산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183) 관세법 제42조(가산세).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2019.12.31. 관세법 개정
124p 4번째줄	5) 가산세 경정 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정신고시 또는 경정시 납부하는 가산세를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한다.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5) 가산세 경정 후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족세액과 함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가산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수정신고시 또는 경정시 납부하는 가산세를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라고 한다.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2019.12.31. 관세법 개정
125p 제목 및 1번째줄	제5절 카산금·가산세 카산금(additional charges)과 가산세(additional tax)는 통관을 신속하게 하고 관세 등의 납부를 적정하게 하고자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강제하는 간접적인 수단이다. 카산금은 납부기한 내에 관세 등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간접적인 수단으로서 기한의 엄수가 목적이다. 따라서 카산금은 납부 기한을 경과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부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가산세는 신고인이 관세를 성실하고 정확히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하는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통관지연 및 관세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제5절 가산세 가산세(additional tax)는 통관을 신속하게 하고 관세 등의 납부를 적정하게 하고자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게 강제하는 간접적인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납부해야 할 관세보다 부족하게 납부하는 경우, 이에 따른 통관지연 및 관세행정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2019.12.31. 관세법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25p 13번째줄	<p>가산세는 신고납부시에만 부과할 수 있다. 부과고지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는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p> <p>성격으로 보면 가산세는 법규에서 정한 의무불이행의 과태료적 성격을 갖는데 비해, 가산금은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적 성격을 갖는다. 이하에서 가산금과 가산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p>	<p>가산세는 신고납부시에만 부과할 수 있다. 부과고지시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데 이는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게 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p> <p>관세법 일부 개정(2019.12.31. 일부개정, 시행 2020.1.1.)에 따라 가산금 규정을 삭제하고 가산세 규정에 이를 통합하였다. 납세자가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고지전에 적용되는 기간이자 성격의 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가산금을 일원화한 것이다. 이하에서 가산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p>	2019.12.31. 관세법 개정
126p전체 및 127p 1~3번째줄	<div>1 가산금</div> <p>1) 의 의</p> <p>2) 가산금 징수</p> <p>(1) 1차가산금</p> <p>(2) 중가산금</p> <p>3) 적용제외</p>	전체 삭제	2019.12.31. 관세법 개정
127p 제목	<div>2 가산세</div>	<div>1 가산세</div>	2019.12.31. 관세법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27p 7번째 줄 및 각주	<p>1)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p> <p>세관장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징수한다.</p> <p>(1) 일반적인 경우</p> <p>세관장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시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¹⁹³⁾</p> <p>①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신고불성실 가산세)</p> <p>②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납부불성실 가산세)</p> <p style="padding-left: 20px;">÷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hr/> <p>193) 가산세의 면제와 경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구분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다.</p>	<p>1)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p> <p>세관장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를 징수한다.</p> <p>(1) 일반적인 경우</p> <p>세관장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시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¹⁹³⁾</p> <p>①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신고불성실 가산세)</p> <p>② 다음 각 항목을 합한 금액(납부지연 가산세)</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지연이자 성격</p> <p style="padding-left: 40px;">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 style="padding-left: 20px;">나. 체납액에 대한 제재</p> <p style="padding-left: 40px;">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p> <hr/> <p>193) 종전의 가산금 규정을 통합하기 위하여 가산세액을 미납부세액 가산세와 부족세액 가산세 개념으로 구분하였고 종전 가산금은 미납부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제2호 나목이 미납부세액에 해당한다.</p>	2019.12.31. 관세법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28p 1번 제출	<p>(2)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p> <p>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①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신고불성실 가산세)</p> <p>②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불성실 가산세)</p> <p>\therefore 해당 부족세액 \times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times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부당한 방법: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p>	<p>(2)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p> <p>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①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신고불성실 가산세)</p> <p>② 다음 각 항목을 합한 금액(납부지연 가산세)</p> <p>가. 지연이자 성격</p> <p>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times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times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나. 체납액에 대한 제재</p> <p>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times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p> <p>부당한 방법: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p>	2019.12.31. 관세법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28p 9줄	<p>(3)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경우</p> <p>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법 제16조 제11호)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①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p> <p>②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p> <p>÷ 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3)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경우</p> <p>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법 제16조 제11호)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p> <p>① 해당 관세액의 100분의 20 (법 제269조의 밀수출입죄에 해당하여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0분의 40)</p> <p>② 다음 각 항목을 합한 금액</p> <p>가. 지연이자 성격</p> <p>해당 관세액 × 수입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p> <p>나. 체납액에 대한 제재</p> <p>해당 관세액 중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p>	2019.12.31. 관세법 개정
129p 각주추가	<p>(4) 가산세의 면제</p>	<p>(4) 가산세의 면제¹⁹⁴⁾</p> <p>_____</p> <p>194) 관세법 제42조의2</p>	2019.12.31. 관세법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29p 14번째줄	<p>㉠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p> <p>㉡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카산금 면제대상 중 다음의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p> <p>② 우편물.(다만,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p> </div> <p>㉣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p>	<p>㉠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p> <p>㉡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제32조의4 제5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p> <p>② 우편물.(다만,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제외한다.)</p> </div> <p>㉣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관세법 시행령 제39조제3항, 제32조의4 제6항)</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①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에 따라 신고·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p> <p>③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p> </div>	2019.12.31. 관세법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30p 2번째줄 및 표1	<p>② 가산세 일부 면제</p> <p>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부과한다.¹⁹⁷⁾ 이는 귀책사유가 납세의무자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간의 경과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이다.</p> <table> <tr> <th>구분</th> <th>신고불성실가산세</th> <th>납부불성실가산세</th> </tr> <tr> <td>면제여부</td> <td>면제</td> <td>부과</td> </tr> </table> <p>¹⁹⁷⁾ 관세법 시행령 제39조(가산세). 가산세 일부면제</p>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여부	면제	부과	<p>② 가산세 일부 면제</p> <p>다음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고 납부지연 가산세만을 부과한다.¹⁹⁷⁾ 이는 귀책사유가 납세의무자에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간의 경과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만을 부과하는 것이다.</p> <table> <tr> <th>구분</th> <th>신고불성실가산세</th> <th>납부지연가산세</th> </tr> <tr> <td>면제여부</td> <td>면제</td> <td>부과</td> </tr> </table> <p>¹⁹⁷⁾ 관세법 제42조의2</p>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여부	면제	부과	2019.12.31. 관세법 개정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여부	면제	부과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여부	면제	부과													
130p 표2	<p>(5) 가산세 경감</p> <p>① 조기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p> <p>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일부분을 경감한다. 경감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tr> <th>구분</th> <th>신고불성실 가산세</th> <th>납부불성실 가산세</th> </tr> <tr> <td>경감여부</td> <td>경감(10% 또는 20%)</td> <td>부과</td> </tr> </table>	구분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경감여부	경감(10% 또는 20%)	부과	<p>(5) 가산세 경감</p> <p>① 조기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p> <p>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일부분을 경감한다. 경감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 <tr> <th>구분</th> <th>신고불성실 가산세</th> <th>납부지연가산세</th> </tr> <tr> <td>경감여부</td> <td>경감(10% 또는 20%)</td> <td>부과</td> </tr> </table>	구분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경감여부	경감(10% 또는 20%)	부과	2019.12.31. 관세법 개정
구분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경감여부	경감(10% 또는 20%)	부과													
구분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경감여부	경감(10% 또는 20%)	부과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31p 표1 및 12번째줄	<p>② 과세전적부심사 지연통지시 가산세 경감</p> <p>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가 청구인에게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일부분을 경감한다. 경감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tr><th>구분</th><th>신고불성실가산세</th><th>납부불성실 가산세</th></tr><tr><td>경감여부</td><td>부과</td><td>경감(50%)</td></tr></table> <p>㉠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금액이란 납부불성실 가산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p>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경감여부	부과	경감(50%)	<p>② 과세전적부심사 지연통지시 가산세 경감</p> <p>세관장은 관세심사위원회가 청구인에게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의 일부분을 경감한다. 경감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p> <table><tr><th>구분</th><th>신고불성실가산세</th><th>납부 지연가산세</th></tr><tr><td>경감여부</td><td>부과</td><td>경감(50%)</td></tr></table> <p>㉠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세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금액이란 납부지연 가산세 중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세 계산식에 결정·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p>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경감여부	부과	경감(50%)	2019.12.31. 관세법 개정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경감여부	부과	경감(50%)																									
구분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 지연가산세																									
경감여부	부과	경감(50%)																									
133p 표1	<p>\ 가산세별 기준금액 \</p> <table><tr><th>구분</th><th>기준금액</th></tr><tr><td>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td><td>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td></tr><tr><td>재수출불이행가산세</td><td>관세</td></tr><tr><td>수입·반송 신고지연 가산세</td><td>과세가격</td></tr><tr><td>휴대품·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td><td>납부세액(관세+내국세)</td></tr><tr><td>즉시반출후 수입신고지연가산세</td><td>관세</td></tr></table>	구분	기준금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재수출불이행가산세	관세	수입·반송 신고지연 가산세	과세가격	휴대품·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	납부세액(관세+내국세)	즉시반출후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관세	<p>\ 가산세별 기준금액 \</p> <table><tr><th>구분</th><th>기준금액</th></tr><tr><td>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td><td>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td></tr><tr><td>재수출불이행가산세</td><td>관세</td></tr><tr><td>수입·반송 신고지연 가산세</td><td>과세가격</td></tr><tr><td>휴대품·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td><td>납부세액(관세+내국세)</td></tr><tr><td>즉시반출후 수입신고지연가산세</td><td>관세</td></tr></table>	구분	기준금액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재수출불이행가산세	관세	수입·반송 신고지연 가산세	과세가격	휴대품·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	납부세액(관세+내국세)	즉시반출후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관세	2019.12.31. 관세법 개정
구분	기준금액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재수출불이행가산세	관세																										
수입·반송 신고지연 가산세	과세가격																										
휴대품·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	납부세액(관세+내국세)																										
즉시반출후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관세																										
구분	기준금액																										
신고불성실·납부지연가산세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재수출불이행가산세	관세																										
수입·반송 신고지연 가산세	과세가격																										
휴대품·이사물품 미신고 가산세	납부세액(관세+내국세)																										
즉시반출후 수입신고지연가산세	관세																										
133p	<div><div>3</div><div>가산금과 가산세의 차이점</div></div> <table><tr><th>구분</th><th>가산세</th><th>가산금</th></tr><tr><td>목적</td><td>성실한 의무이행</td><td>채납방지</td></tr><tr><td colspan="3">(이하생략)</td></tr></table>	구분	가산세	가산금	목적	성실한 의무이행	채납방지	(이하생략)			전체삭제	2019.12.31. 관세법 개정															
구분	가산세	가산금																									
목적	성실한 의무이행	채납방지																									
(이하생략)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36p 4번째줄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른 사유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법상 관세·카산금·채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다음 경우에 소멸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다른 사유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법상 관세· 가산세 ·채납처분비의 납부의무는 다음 경우에 소멸한다.	2019.12.31. 관세법 개정																																																
137p 표	<div>\ 관세부과권과 징수권의 비교 \</div> <table><tr><th>구 분</th><th>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th><th>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th></tr><tr><td>개 념</td><td>특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여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td><td>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td></tr><tr><td>대 상</td><td>관세부과권(형성권)</td><td>관세징수권(청구권)</td></tr><tr><td>기 간</td><td>5년(예외 10년)</td><td>5년 또는 10년</td></tr><tr><td>기산일</td><td>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td><td>납부기한의 다음날</td></tr><tr><td>중단과 정지</td><td>없음</td><td>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과 정지 있음</td></tr><tr><td>기간만료 효과</td><td>관세부과권이 소멸되는 것</td><td>관세징수권이 소멸되는 것</td></tr></table>	구 분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개 념	특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여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대 상	관세부과권(형성권)	관세징수권(청구권)	기 간	5년(예외 10년)	5년 또는 10년	기산일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납부기한의 다음날	중단과 정지	없음	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과 정지 있음	기간만료 효과	관세부과권이 소멸되는 것	관세징수권이 소멸되는 것	<div>\ 관세부과권과 징수권의 비교 \</div> <table><tr><th>구 분</th><th>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th><th>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th></tr><tr><td>개 념</td><td>특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여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td><td>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td></tr><tr><td>성 격</td><td>권리의 존속기간</td><td>권리의 불행사기간</td></tr><tr><td>대 상</td><td>관세부과권(형성권)</td><td>관세징수권(청구권)</td></tr><tr><td>기 간</td><td>5년(예외 10년)</td><td>5년 또는 10년</td></tr><tr><td>기산일</td><td>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등)</td><td>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납부기한의 다음날 등)</td></tr><tr><td>중단과 정지</td><td>없음</td><td>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과 정지 있음</td></tr><tr><td>소급효 유무</td><td>없음(장애에 의하여 소멸)</td><td>있음(기산일에 소급효)</td></tr><tr><td>기간만료 효과</td><td>관세부과권이 소멸되는 것</td><td>관세징수권이 소멸되는 것</td></tr></table>	구 분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개 념	특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여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성 격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의 불행사기간	대 상	관세부과권(형성권)	관세징수권(청구권)	기 간	5년(예외 10년)	5년 또는 10년	기산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등)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납부기한의 다음날 등)	중단과 정지	없음	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과 정지 있음	소급효 유무	없음(장애에 의하여 소멸)	있음(기산일에 소급효)	기간만료 효과	관세부과권이 소멸되는 것	관세징수권이 소멸되는 것	설명추가
구 분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개 념	특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여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대 상	관세부과권(형성권)	관세징수권(청구권)																																																	
기 간	5년(예외 10년)	5년 또는 10년																																																	
기산일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납부기한의 다음날																																																	
중단과 정지	없음	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과 정지 있음																																																	
기간만료 효과	관세부과권이 소멸되는 것	관세징수권이 소멸되는 것																																																	
구 분	관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개 념	특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미리 정하여 놓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동안에 권리가 행사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권리자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불이행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성 격	권리의 존속기간	권리의 불행사기간																																																	
대 상	관세부과권(형성권)	관세징수권(청구권)																																																	
기 간	5년(예외 10년)	5년 또는 10년																																																	
기산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등)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 (납부기한의 다음날 등)																																																	
중단과 정지	없음	징수권 행사로 인해 중단과 정지 있음																																																	
소급효 유무	없음(장애에 의하여 소멸)	있음(기산일에 소급효)																																																	
기간만료 효과	관세부과권이 소멸되는 것	관세징수권이 소멸되는 것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49p 8번째줄	2) 환급시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카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 환급시기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2019.12.31. 관세법 개정
149p 15번째줄	4) 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관세환급가산금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카산금 면제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4) 관세환급가산금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관세환급가산금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우편물(수입신고대상 제외) 등에 대하여는 관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020.2.11. 시행령 개정
151p 각주	223) 멸실·변질·손상 등의 관세환급은 수입물품이 반드시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 한한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서 멸실·변질·손상된 경우 귀책이 납세의무자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에서 관세를 환급한다.	223) 멸실·변질·손상 등의 관세환급은 수입물품이 반드시 지정보세구역에 장치된 경우에 한한다. 지정보세구역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로서 멸실·변질·손상된 경우 귀책이 납세의무자에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에서 관세를 환급한다. 특히 보세구역은 이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추가설명
152p 2번째줄	1) 의 의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반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한다.	1) 의 의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보세판매장 구매물품 등에 대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반품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을 허용한다.	2019.12.31. 관세법 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52p 5번째줄 및 각주	<p>2) 대 상</p> <p>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²²⁵⁾</p> <p>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p> <p>②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p> <p>²²⁵⁾ 관세법 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본조신설 2015.12.15.]</p>	<p>2) 대 상</p> <p>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국내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²²⁵⁾</p> <p>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p> <p>②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p> <p>또한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자진신고한 물품이 보세판매장에 환불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p> <p>²²⁵⁾ 관세법 제106조의2, 관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환급) 참고로 보세판매장 구매물품에 대한 자진 신고에 따른 환급은 2021.1.1.부터 시행한다.</p>	시행령 내용추가 및 2019.12.31. 관세법 개정
171p 16줄	<p>(3) 불인정 공정(6단위 세번변경의 불인정)</p> <p>(이하생략)</p>	<p>(3) 불인정 공정(6단위 세번변경의 불인정)</p> <p>(이하생략)</p> <p>(4)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 우선</p> <p>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p>	2019. 3. 20. 시행령 74조 개정 내용 추가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72p 4번째줄	③ 포장용품 :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포장용품 :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 다만, 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따를 수 있다.	2019. 3. 20. 시행령 75조개정 내용 추가
180p 14번째줄	(2) 입항전신고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 등에서 출항한 후 입항(항공화물은 하기신고시점, 해상화물은 하선신고시점 기준)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 입항전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물품을 적재한 항구나 공항에서 출항한 후 입항(「관세법」 제135조에 따라 최종 입항보고를 한 후 하선(기) 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입항보고를 하기전에 하선(기)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종 입항보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019.5.20. 고시개정
181p 1번째줄	(3) 보세구역도착전신고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당해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고자 하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세구역도착전신고 수입물품을 선(기)적한 선박 등이 입항하여 당해물품을 통관하기 위하여 반입하려는 보세구역(부두박 컨테이너 보세창고와 컨테이너 내륙통관기지를 포함)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내용 추가
184p 5번째줄	(2) 예외: 종이서류 제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김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②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③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④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수입통관고시 제15조 제2항)	(2) 예외: 종이서류 제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김벌리프로세스증명서 제출대상물품(원본) ② 일시수입통관증서(A.T.A Carnet)에 의한 일시수입물품(원본) ③ SOFA 협정 적용대상물품(원본 또는 주한미군에서 전자서명하여 교부한 증명서) ④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수입통관고시 제15조 제2항)	2019.5.20. 고시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91p 각주	278)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절(특수형태의 수출)	278)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선상수출신고)	오기수정
192p 각주추가	<p>(2) 현지수출 어패류신고</p> <p>(3) 원양수산물 신고</p> <p>(4) 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p>	<p>(2) 현지수출 어패류신고²⁷⁷⁾</p> <p>(3) 원양수산물 신고²⁷⁸⁾</p> <p>(4) 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²⁷⁹⁾</p> <p>_____</p> <p>²⁷⁷⁾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현지수출 어패류신고)</p> <p>²⁷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p> <p>²⁷⁹⁾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p>	고시조문 표기
193p 4줄	<p>㉞ 전기</p> <p>㉞ HS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 중 식물 및 편물</p> <p>㉞ HS 71류부터 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p> <p>㉞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p>	<p>㉞ 전기</p> <p>㉞ HS 제50류부터 제60류까지 중 식물 및 편물</p> <p>㉞ HS 71류부터 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p> <p>㉞ 전자상거래 수출물품</p> <p>㉞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p>	2019.12.31. 고시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93p 10줄	<p>② 수출신고시기</p> <p>수출신고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신고 정정승인신청서 사용)할 수 있다.</p> <p>4) 밀수출 우려 물품의 수출</p> <p>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²⁷⁹⁾</p> <p>279)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p>	<p>② 수출신고시기</p> <p>수출신고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신고서 서식 사용)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신고 정정승인신청서 사용)할 수 있다.</p> <p>(5) 외국무역선(기) 신고²⁷⁹⁾</p> <p>외국 운항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기)을 매각하여 국내로 다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수출 후 대금 수령 후 30일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수출 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 등 신고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4) 밀수출 우려 물품의 수출</p> <p>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제외할 수 있다.²⁸⁰⁾</p> <p>①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②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③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p> <p>279)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의1(외국무역선(기) 신고) 280)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관세법 시행령 제248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의 대상 등)</p>	2019.12.31. 고시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194p 4번째줄	<p>신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다음의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한다.</p> <p>① 관세법 제226조와「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3조에 따른 수출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p> <p>②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p>	<p>신고인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 및 다음의 구비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서류제출’로 기재한다.</p> <p>① 관세법 제226조와「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단,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p> <p>②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다만,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p>	고시내용 정정
195p 11번째줄	<p>1) 수출신고의 취하</p> <p>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수출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p>	<p>1) 수출신고의 취하</p> <p>수출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신고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고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이미지 전송 포함)여야 한다. 수출신고취하신청(승인)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수출신고취하를 승인하여야 한다.</p>	2019.12.31. 고시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206p 1번째줄 및 각주	<p>② 전자상거래 수출업체</p> <p>전자상거래물품을 수출신고하려는 전자상거래업체는 미리 신고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²⁹⁹⁾</p> <p>전자상거래 수출업체로 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상호, 대표자, 인터넷 도메인 주소의 변경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해 신고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인 소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변경(취소)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변경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의 유효기간은 신고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p> <p><u>299)</u>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의3(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 등)</p>	<p>② 전자상거래 수출업체</p> <p>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 15(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²⁹⁹⁾</p> <p><u>299)</u>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제14호</p>	2019.12.31. 고시개정
208p 각주	<p>(5) 배송지의 통보</p> <p>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6) 특별통관의 배제</p> <p>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위반하거나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³⁰⁸⁾</p> <p><u>308)</u>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민감품목이 있다.</p>	<p>(5) 배송지의 통보</p> <p>탁송품 운송업자는 통관목록에 적힌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탁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배송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³⁰⁹⁾</p> <p>(6) 특별통관의 배제</p> <p>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 제254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거나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p> <p><u>309)</u> 허위로 신고한 배송지 정보분석 등을 통해 타인 명의의 도용을 방지하고 관세 탈루와 요건확인 면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p> <p><u>310)</u>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물품에는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등 민감품목이 있다.</p>	설명추가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210p 1번째줄 및 7번째줄	<p>보세(保稅)란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관세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를 말한다. 관세법에는 보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세법상 보세제도라 함은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를 말한다.</p> <p>(중략)</p> <p>보세구역이나 보세운송 모두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물품의 이동이나 반출입 등에서 세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까지 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하에서는 보세구역에 대해서 살펴본다.</p>	<p>보세(保稅)란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보세(保稅)’는 글자 그대로 보면 일정한 목적으로 관세 부과를 미루어 두는 상태를 말한다. 물품관리에서 적용되는 보세개념은 무세·감면물품에도 적용되므로 납세미필로 보기는 어렵고 수입신고수리 미필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세법에는 보세제도를 두고 있는데 관세법상 보세제도라 함은 보세구역제도와 보세운송제도를 말한다.</p> <p>(중략)</p> <p>보세구역이나 보세운송 모두 수입신고수리 미필 상태로 물품의 이동이나 반출입 등에서 세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까지 수입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하에서는 보세구역에 대해서 살펴본다.</p>	설명추가
223p 15번째줄	<p>(1) 보세사 요건</p> <p>보세사는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³³⁰⁾</p> <p>①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②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전형에 합격한 사람</p> <p>³³⁰⁾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운영인의 결격사유란 특히 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로서 관세법 제175조에 규정된 사유를 말한다.</p>	<p>(1) 보세사 요건</p> <p>보세사는 운영인의 결격사유(관세법 제17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보세화물의 관리업무에 관한 시험(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보세사의 자격이 있다.³³⁰⁾</p> <p>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관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면제한다.</p> <p>³³⁰⁾ 관세법 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 운영인의 결격사유란 특히 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로서 관세법 제175조에 규정된 사유를 말한다.</p>	2019.12.31. 관세법개정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229p 12번째줄	3) 검사비용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3) 검사비용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관세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2020.7.1. 시행)	2019.12.31. 관세법개정
232p 10번째줄 및 각주	(1) 반입정지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hr/> 330)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	(1) 반입정지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보세판매·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고조사 결과 원자재소요량 관리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 1년 동안 계속하여 물품의 반입·반출 실적 없거나, 6개월 이상 보세작업을 하지 않은 경우 - 운영인이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절차 등을 위반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hr/> 330) 관세법 제178조(반입정지 등과 특허의 취소)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특허보세구역의 물품반입 정지 사유)	2019.12.31. 관세법개정 2020.2.11 시행령 신설

페이지	2019년 기본교재 내용	개정 내용	비 고
244p 6번째줄	<p>2) 보세판매장의 종류</p> <p>보세판매장은 크게 외교관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으로 구분한다.</p> <p>외교관면세점은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이다.</p> <p>출국장면세점이란 운영인이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하며, 시내면세점이란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p>	<p>2) 보세판매장의 종류</p> <p>보세판매장은 크게 외교관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으로 구분한다.</p> <p>외교관면세점은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이다.</p> <p>출국장면세점이란 운영인이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하고, 입국장면세점이란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항,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말하며, 시내면세점이란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p>	2018.12.31. 관세법개정
256p ~260p	<p>2 Incoterms 2010 규칙의 주요특징</p>	본 개정표 29~31p 참고	
261p ~331p	<p>1 EXW(공장인도) 부터</p> <p>4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까지</p>	인코텀즈 2020 각개 조항 삭제	

1) 주요개정 내용

(1) 개별규칙 내 조항순서 변경을 변경

각 규칙 내의 10개 조항(A1~A10, B1~B10)의 순서와 조문 표제를 중요도에 따라 일부 순서 변경하였으나 비용은 중요도에 불구 아래쪽에 위치비용분담을 A9/B9(Allocation of costs) 조항에 모두 모아 놓았다.

(2) CIF와 CIP간 적하보험부보 수준 변경

CIP와 CIF의 적하보험 부보수준을 차별화하여 CIP에서는 ICC(A)조건으로 부보수준을 강화하였고, CIF에서는 ICC(C)조건을 유지하였다. 보험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을 CIF의 경우 기존대로 ICC(C) 부보의무를 두고 있는 반면, CIP의 경우 최대담보조건 ICC(A)으로 변경되었다.

(3) FCA상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Bills of lading with on-board notation)'의 발급 가능

FCA규칙에서 인도(delivery)는 물품이 본선적재 전에 이미 완료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아, FCA규칙 A6/B6(Delivery/transport document)에서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하면, 매도인이 본선적재표기 선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4) DAT가 DPU로 명칭변경

DAT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규칙 순서(order)도 도착지 양하 전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DAP가 먼저 오고, 양하한 후 인도가 이루어지는 DPU가 뒤에 오게 되었다. 인코텀즈 2020에서 규칙 순서(order)는 인도시점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는데, 인도시점에서 보면 DAP와 DDP(다만 수입통관을 매도인이 해야 함)는 양하 전(양하 준비된 상태)에 인도가 이루어지는 반면, DPU는 양하한 후(양하된 상태)에 인도가 이루어짐에도, D규칙 순서는 DAP, DPU, DDP로 배열하고 있다.

(5) FCA/DAP/DPU/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FCA, DAP, DPU 및 DDP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자신의 운송수단을 마련하도록 했다. 전용기, 전용선박 외에도 국내거래도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차량운송도 인정된다. D규칙에서는 제3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지 않고 매도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을 사용하여 운송하거나, FCA 규칙에서는 매수인이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구내까지 운송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 이에 FCA, DAP, DPU 및 DDP에서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다.

(6) 운송의무(carriage obligation)및 비용조항 보안(Security) 관련 요건 삽입

보안은 운송(carriage)과 관련한 사항으로 보고, 각 규칙의 A4(carriage)및 A7(export clearance)에서 보안관련 의무를 명시하고, A9/B9(allocation of costs)에서 보안관련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7)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보강

각 조건 앞에 있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설명문 명칭이 인코텀즈 2010 “사용지침(Guidance Note)”에서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로 변경되고, 사용자 중심으로 내용이 충실해졌다.

(8) 소개문(Introduction) 강화

인코텀즈 2020규칙 자체의 일부를 구성하지는 않으나 기초적 사항들을 비교적 상세하고 유익하게 설명하고 있다.

2) Incoterms® 2020의 11개 규칙의 분류

Incoterms® 2020의 11개 규칙은 2 부류로 대별되어 있다.

(1)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가능한 규칙(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① EXW 공장인도(EX WORKS)
- ② FCA 운송인인도(FREE CARRIER)
- ③ CPT 운송비지급인도(CARRIAGE PAID TO)
- ④ CIP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⑤ DAP 도착장소인도(DELIVERED AT PLACE)
- ⑥ DPU도착지양하인도(DELIVERED AT PLACE UNLOADED)
- ⑦ DDP 관세지급인도(DELIVERED DUTY PAID)

(2) 해상운송과 내수운송에 사용가능한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① FAS 선측인도(FREE ALONGSIDE SHIP)
- ② FOB 본선인도(FREE ON BOARD)
- ③ CFR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 ④ CIF 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에서는 EXW, FCA, CPT, CIP, DAP, DPU, DDP 등 7개의 규칙을 규정하고,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에서는 FAS, FOB, CFR, CIF 등 4개의 규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각 11개 규칙의 시작 부분에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을 두고, 그 후로 매도인의 의무 10개 항목(A1~A10)과 매수인의 의무 10개 항목(B1~B10)을 대칭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운송방식용 규칙(EXW, FCA, CPT, CIP, DAP, DPU, DDP)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고, 둘 이상의 운송방식이 이용되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즉 복합운송방식에도 사용 가능). 그러나 해상 및 내수로 운송방식용 규칙(FAS, FOB, CFR, CIF)은 해상운송이나 내수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3) 인코텀즈 2020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 2020)

소개문(Introduction to Incoterms)은 개별 규칙의 일부는 아니지만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인코텀즈 2020 규칙(Incoterms® 2020 rules)의 적용사항과 미적용사항, 그리고 인코텀즈 규칙의 편입(계약에 편입)방법 설명
- 다음과 같은 인코텀즈 규칙의 기초사항(important fundamentals) 제시: 매 도인과 매수인의 기본적 역할과 책임, 인도, 위험, 그리고 인코텀즈 규칙과 계약과의 관계
- 특정 매매계약에 적합한 인코텀즈 규칙의 선택방법 설명
- 인코텀즈 2010과 인코텀즈 2020 간 주요 변경사항 제시

추가로 인코텀즈의 적용사항은 ①의무(Obligations,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 ②위험(Risk, 매도인은 어디서 그리고 언제 물품을 인도하는지?), ③비용(Costs, 어느 당사자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등이고, 매매계약의 준부, 매매물품의 성상(性狀), 대금지급의 시기·장소·방법 또는 통화, 매매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계약상 의무이행의 지체 및 그 밖의 위반의 효과, 제재의 효력, 관세부과, 수출 또는 수입의 금지, 불가항력 또는 이행거절, 지식재산권, 의무위반시 분쟁해결의 방법·장소 또는 준거법 및 소유권/물권의 이전 미적용사항이다.

3)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들의 각각의 시작 부분에는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 for Users)’을 두고 있다. 인코텀즈 2010의 사용지침(Guidance Note)이 인코텀즈 2020의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으로 대체되었는데, 인코텀즈 2010의 “사용지침(Guidance Note)”보다 상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인코텀즈 2020의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에서는 각 규칙이 언제 사용되어야 하는지, 언제 위험이 이전되는지, 당사자들 사이에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등 각 규칙의 ‘기초적인 쟁점(fundamental issues)’을 설명하고 있으나 인코텀즈 규칙의 일부인지에 대한 기술이 없다.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Explanatory Notes for Users)은 (a) 사용자들이 특정거래에 적합한 인코텀즈 규칙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는 데 도움을 주고, (b) 인코텀즈 2020이 적용되는 분쟁이나 계약에 관하여 결정 또는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침(guidance)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